

□ 전반의 성공으로 끝난 남북 장관급 회담

1. 주요 합의 내용과 평가

○ (총평) 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합의 도출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제고는 물론, 남북 관계의 복원과 보다 진전된 관계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

- (주요 내용) 핵 문제와 농업 및 수산업 협력 등을 포함하여 정치·군사·경제·사회문화 등의 제반 분야에 걸쳐 12 개항에 합의하였음

- (북핵)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최종 목표로 하며,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.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장관과의 회담(6. 17)에서 '조건부 7월중 북귀' 용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됨
- (정치·군사)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장관급회담의 개최,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함
- (경제 협력)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의 분야별 남북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합의함으로써 일회성의 단순 지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공동 어로 사업 등으로의 경협 분야 확대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

<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 >

	주요 내용
북핵	-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감
정치 · 군사	- 제16차 및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(각각 9. 13~16일, 12월중) -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(백두산, 일시는 추후 합의) - 북측 민간 선박들의 제주 해협 통과
경제 협력	- 제10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개최(7. 9~12일, 서울) - 수산 협력실무협의회 구성, 공동어로 등 수산 협력 문제 협의(7월중) - 농업 협력위원회 구성(7월 중순경 1차회의 개최, 개성) - 북측에 식량 제공, 구체적 절차는 7월의 경협추진위원회에서 논의
사회 · 문화	- 8.15 남북공동 행사에 당국 대표단 파견(7월 중 실무 접촉, 개성) - 일제의 을사 5조약 원천 무효 확인 ·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
인도주의	- 이산가족 상봉(8. 26) 및 금강산 면회소 건설 착공식(7월 중 지질 조사) · 제6차 적십자회담 개최(8월 중), 전쟁포로 등의 생사 확인을 협의 - 8.15에 이산가족 화상 상봉의 시범 개시(7. 10일 실무 접촉, 개성)

- (인도주의)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화상 상봉 시범 개시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의 대규모화· 본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
  - (배경) 회담의 풍성한 성과 도출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료· 식량 지원이 시급한 북한의 내부 상황, 핵 해결에 대한 국제적 압박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
- (평가)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제도화·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, 북핵 문제의 '남북 문제화'와 남북 대화의 유용성 제고의 계기를 제공함
- (긍정적 측면) 차관급회담과 정동영 장관-김정일 위원장과의 6.17 면담에 이은 이번 장관급회담으로 남북 관계는 김 주석 조문 불허와 탈북자의 대량 입국 사태 이후 1년 여 만에 완전히 정상화·복원되었음을 의미함
  - 또한, 북핵을 비롯한 정치·군사 부문의 합의 도출과 다양한 분야의 후속 실무회담의 일정 확정 등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,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을 한 단계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
  - 특히,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합의 도출은 북핵 문제의 '남북 문제화'와 남북 대화의 유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
  - 이외에, 회담 형식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남북간 氣싸움·줄다리기식의 소모적 회담 운영과 달리, 시종일관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으로 폐막 하루 전에 합의문을 도출한 최초의 회담이었음
  - (부정적 측면) 다만 구체적 해결 방안 도출 없는 원칙론적인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와 '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'라는 조건부 북핵 해결 합의는 '외화 내빈'(外華內貧)이라는 아쉬움을 남김
  - 또한 6.17 면담에서 논의된 '서울~평양간 직항로' 개설 문제도 추진 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회담 성과를 절하하는 요인으로 작용

## 2. 향후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 전망

- (북핵 전망) 북미 양측의 유연한 입장 변화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, 양측간의 명분 싸움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음

- (북한) 최근에 들어 6.17 면담과 뉴욕 채널 등의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혀오고 있음
  - 북한 UN대표부의 고위 관리는 “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용어를 (최소한 한 달만이라도)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6자회담 참여 명분을 달라”고 요청하였음
  - 특히, 6.17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에 대해 ‘각하’ 호칭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, “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최종 목표이며 관철해야 하며 ... 상대방(미국)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뜻이 확고하다면 7월 중이라도 나올 수 있다”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혔음
  - 그동안 북측은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과 명분으로 ① 미국의 체제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② 대등한 자격의 협의 약속 ③ 폭정의 전초 기지 발언 사죄 및 취소 등을 제시하였음
  
- (미국) 주권 국가로서의 북한 인정과 대북 자극 발언 자제 등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
  - 미 국무부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침공 의사가 없음을 밝힌 데 이어, 5만 톤의 대북 식량 지원과 힐 차관보의 방북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
  -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‘미스터 김정일’로 호칭했을 뿐 아니라,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“체제 안정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(more normal relations) 추진이 가능하며 ... 미국의 제안에는 수많은 유인책(a lot of inducements)이 들어있다”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음
  - 또한 라이스 장관도 한국의 대북 자극 발언 자제 요청에 대해 “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유념하겠다”고 화답함으로써, 6자회담 복귀 명분 제공을 위한 ‘북한에 대한 대화 상대 인정과 존중’ 분위기 조성 노력을 보이고 있음
  
- (북핵 전망)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제고로 한반도 ‘위기설’이 새로운 ‘기회설’로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으나, 양측간의 명분 싸움으로 단기간 내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낙관할 수 없음
  - 북한의 조건부 복귀와 미국의 ‘先폐기 後보상’ 원칙 고수 등 북미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와 깊은 불신이 최근의 변화로 완전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임

-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구체적인 6자회담 복귀 날짜 표명 요청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, 미국은 6월중에도 북한 등을 겨냥한 '민주주의 증진법'(Advance Democracy Act of 2005)을 상정하였음
  - 따라서 북핵 해법에 대한 양자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 존재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 진전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듯함
- (남북 관계 전망) 6.17 면담과 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일정에 따라,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협 부문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됨
- (남북 관계)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파 남북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인도주의와 사회·문화 부문의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
    - (정치·군사 부문)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 해협 통과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, 상호 비방 등에 대한 실무 협의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나, 장관급 회담 등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음
    - (인도주의 및 사회·문화)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화상 상봉 실시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나,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생사·주소 확인 문제는 북측이 국군포로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됨
  - (남북 경협) 3대 경협사업은 물론, 농업과 수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지원과 차관 등의 비거래성 교역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임
    -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 부문을 '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공전선'(主攻 戰線)으로 규정한 만큼, 이 분야의 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음
    - 따라서 비료와 농약 등의 농기자재 지원과 영농 기술, 품종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NGO 단체들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
    - 또한, 공동 어로와 어장 사용 등의 어업 협력은 경협 차원을 넘어 해상에서의 긴장 완화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므로 적극 검토해 볼만함
    - 수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입어료 지불이나 어획고의 일정 비율 배분 방식의 단순 협력을 비롯하여, 중장기적으로는 어선·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력 향상과 항만 시스템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어업·해운 협력을 지향해야 함

홍순직 수석연구위원 (3669-4182, sjhong@hri.co.kr)